

제2장 통일환경의 변화

제1절 국제정세

제2절 북한의 현황

제1절 국제정세

1. 국제정세 변화의 특징

1980년대 후반기를 기점으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실리 위주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난 국제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구소련 및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 체제를 스스로 변용·해체시키면서 국제환경의 변화를 촉발하였고 다시 그 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혁의 과정을 밟아 왔다는 점이다. 냉전 종식 이후 새롭게 형성된 국제질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제질서의 성격을 규정하던 양대 초강국의 위상은 쇠퇴하고, 이들의 지위를 보장하던 군사적 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국가간의 이념적인 대립은 급속히 감소되고, 그 대신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한 실리 위주의 정책들이 주조를 이룸에 따라서 과거 이념의 확산과 세력의 확장을 뒷받침했던 군사력의 중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경제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둘째, 양극체제하의 체제경쟁에서 나타나던 제로섬(Zero Sum)적 사고가 상호 이익을 존중·조화시키는 입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추구가 국제정치의 핵심이 되었다. 즉 과거 체제경쟁에서는 정치·군사적면에서 세력 확장을 위한 소모전 양상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현 국제질서는 상호 정치·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과 협조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셋째, 국가 및 지역 간의 분쟁 해결이나 환경오염, 핵개발, 인권문제, 마약, 경제개발 등과 같은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차원적인 상호의존

성이 중시되고 있다.

넷째, 지구적 문제의 해결이나 다자간협상은 국제적 협력의 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빈부국간의 갈등 증대 및 지역주의(Regionalism)의 강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간 협력의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즉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과 같이 지역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 국제정세 변화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

동북아지역은 아직 탈냉전의 질서가 완전하게 자리잡힌 것은 아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 점진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한반도의 대결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남북간의 대결관계가 국제냉전체제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던 데 반해 이제는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외부요소가 사라짐으로써 우리 민족의 노력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증가되었다.

특히 대남 적화통일을 추구하였던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소련이 해체되었으며 중국도 우리나라와 수교하였고,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함으로써 남북간 갈등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동아시아지역의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간의 전통적 경쟁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국간의 역학관계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복잡성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한반도 통일과 이들 주변국의 이해관계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변국가 모두는 최소한 한반도에서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가들의 공감대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남북간의 무력대결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화해와 협력의 국제조류는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는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모든 국가가 협력을 추구하지 않고는 생존과 발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국제적 흐름은 모든 국가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북한도 장기적으로는 생존을 위해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주변국의 요구를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동참할 여건은 더욱 높아졌다고 하겠으며, 이렇게 될 때 남북관계도 크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한편 최근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현상은 남북간 현안문제 해결이 국제적 틀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수로 건설에 있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국제식량계획(WFP)이 전면에 나서고 있고, 두만강 개발계획을 유엔개발계획(UNDP)이 주관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선하에 남북간 항공로를 개설하는 합의도 성립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사회가 한반도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는 한편 국제적 협력차원에서 남북간의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추세에서도 알수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 문제가 정치·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식량문제, 경제문제, 인도적 문제 등 다원화되고 있는 점도 큰 특징이다.

요컨대 한반도 문제는 과거 냉전질서의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맞이하였으며 실질적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속에서 남북한이 상호 슬기를 발휘하여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제2절 북한의 현황

1. 권력승계

1997년 10월 8일 북한은 ‘당중앙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를 통해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발표하였

다.

북한은 김정일이 총비서직을 승계함으로써 부분적이거나 권력승계를 이루었으며, 김일성 사망이후 3년여동안 당총비서와 국가주석 등 체제의 중요직책들을 공식으로 남겨두었던 비정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탈피하였다.

그러나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왔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던 1964년 노동당 조직지도원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북한정권의 핵심인 당권 장악에 나섰다 그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1967년 5월의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였다. 이 회의를 기점으로 북한체제는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로 돌입하였는바 당시 당 조직과 선전선동 등 핵심분야를 책임지고 있던 박금철, 이효순 등 소위 갑산파들이 숙청되었다. 북한의 공식 역사서는 이 숙청을 김정일이 주도하였다고 쓰고 있으며, 이로써 김정일은 북한 노동당의 핵심으로 접근하였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선정된 것은 이 사건이 있는 지 7년후인 1974년의 일이다. 그해 2월 비공개리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는 김정일을 당 정치위원으로 선출함과 동시에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후계자로 추대하는 결정’을 채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공식화되었으며 김정일은 이 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사실상 당권 장악에 성공하게 된다.

당권장악에 이어 김정일은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되면서 군권 장악에도 본격적으로 나서, 1991년 12월 24일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는 1992년 헌법개정을 통해 분리·독립되고 권한이 강화된 국방위원장에 취임함으로써 이를 완성하게 된다.

한편 김정일의 권력장악이 진행됨에 따라 이미 1986년 5월 김일성은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 각종 선전매체들은 북한에서 “영도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었다”는 선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특히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이 되던 무렵부터 김정일은 ‘당·국가·군대의 수위’로 호칭되어 김일성 사후 3년간의 공백기간이 있긴 하였지만 김

정일의 당총비서직 승계, 나아가 권력의 승계는 시기와 형태가 문제였을 뿐 그 자체는 새로운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1997년 10월의 김정일 당총비서 승계는 그 절차에 있어 예전 김일성 시대의 그것에 비하면 다소 이례적인 것이었다. 김일성이 당총비서에 선출될 때에는 통상 당대회 혹은 당 대표자회를 열고 그 마지막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당총비서에 선출되어 왔다.

이에 비해 김정일의 당총비서 추대절차를 보면, 먼저 1997년 9월 21일 평안남도 당 대표회를 필두로 10월 3일까지 12개 시·도 및 군 당대표회를 개최하여 김정일을 당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당대회나 당대표자회를 열지 않고 바로 ‘특별보도’ 로써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추대되었다고 선포한 것이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당총비서 선출의 권한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 회의가 열렸었는지, 김정일을 총비서로 추대하자는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은 김정일의 당총비서 선출절차의 하자 문제에 대해 “그 어떤 실무적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당적인 일대 정치적 사업으로 당의 최고 영도자를 추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김정일은 그가 당 총비서가 되는 문제에서부터 기존의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향후 김정일체제의 불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2. 대내정책

북한은 그동안 제반 대내외 정책의 목표를 소위 김일성이 창시하였다는 주체사상 구현을 통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공산주의화’ 하는 데 두어 왔다. 이를 위해 북한은 소위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등의 방침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김일성 사후 권력의 구심점 상실, 심각한 경제난, 외교적 고립과 이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안의 미정립 등 총체적 위기국면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80년대말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이후 주창해 온 주체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를 계속 강조해 오고 있다.

김일성 사후 3년여동안 국가주석과 당총비서 등 최고 권력의 공백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정일이 군부의존의 위기관리체제하에서 국방위원장 및 인민군 최고사령관 직함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오다 1997년 10월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추대됨으로써 어느 정도 권력구조의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총비서직만 승계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직책인 주석직은 아직 공식인 상태에 있어 체제상의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그간 체제유지의 절대적이며 유일한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는 주체사상을 토대로 1996년 ‘붉은기 사상’을 새로이 제기하여 김정일의 사상가적 면모 강조와 아울러 김일성시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붉은기 사상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자주와 창조의 사상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김정일시대의 새로운 사상으로서의 그 의미를 부여, 계속 강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면에서는 1990년 이후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자력 성장의 잠재력을 상실하였으며, 에너지, 원자재난 등의 심화로 공장가동률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고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1995년부터는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적 문제로 되었다.

특히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에 따라 설정하였던 완충기(1994~1996) 정책의 성과나 차기 경제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던 점은 완충기의 주요과제인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또한 실패하였음을 시사하는 한편, 이렇다 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완충기를 연장하는 경제마비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극심한 식량 및 물자난으로 각종 사회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체제유지의 근간인 관료사회에 직권남용·뇌물·횡령 등 부정 부패 심화와 무사안일, 보신주의 팽배 등 기강해이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처하여 주민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범죄척결을 위한 본보기식 공개총살, 군대동원 등을 통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사회 저변에 확산되어 있는 사회부조리가 단절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향후정책은 당분간 체제생존 및 김정일 체제의 안정적 기반 확보에 목표를 두고 추진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당분간은 기존 입장을 답습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한 정권이 직면하게 될 대내정책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김정일체제의 안정화 기반 확보, 둘째, 외부로부터의 자본 및 인력 유입시 주민들에 대한 사상적 통제문제, 셋째, 경제난 타개를 통한 주민들의 물질생활 향상문제 등이다.

북한은 김정일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김일성을 ‘선대 수령’으로, 김정일을 ‘후대 수령’, ‘하느님’ 등으로 부르면서 대대적인 상징 조작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가부장제 정치문화인 북한체제의 특성을 감안, 김일성에 대한 최상의 애도와 효도로 자신이 충효의 최고 화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유훈통치를 당분간 지속시켜 대중적 지지기반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김정일은 급격한 세대교체 없이 노·장·청 3세대간의 균형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혁명 1세대들의 자연사로 인한 공석을 점차 자신의 측근 인물인 혁명 2세대의 전문기술관료들을 중심으로 충원해 나갈 것이며 특히 김정일체제 유지의 근간인 군부인물의 대거 등용이 예상된다.

한편, 북한은 이완된 통제력의 강화를 위해 정치·사상적 통제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일성시대보다 김정일 체제에서 외부사조의 침습방지 등 정치·사상적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앞으로도 농업제일주의·경공업제일주의·무역제일주의 등 이른바 ‘3대 제일주의’를 경제전략의 기조로 계속 유지하면서 식량난 해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원자재 및 에너지 부족, 중공업 편중의 경제구조, 생산력 저하 현상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단기간에 회생될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이거나 경제 개방의 점진적 확대와 실용주의 노선 채택을 도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개인사업 허용 등 인민적 소유제도의 확대와 경제관리 및 운영체계의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정일은 최고지도자로서 김일성의 ‘유훈’을 충실히 받들어 나간다는 외양속에서 자신의 통치영역 확대와 독자성을 구축, 김일성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가게 될 것이나, 경제정책의 실패, 군부의 영향력 등 제약요인도 아울러 수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대외정책

북한은 1980년대말 구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체제 해체 등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국제적인 고립 탈피와 내부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미·일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은 김일성 사후에도 기존 대외정책노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체제 유지와 한계상황에 이른 경제난 해결을 위해 대미·일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중·러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기존 우호관계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1994.10.21)이후 핵연료봉 보관·처리, 경수로건설 및 중유지원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과 연락사무소 개설문제에 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미군유해 공동발굴 사업을 진척시키면서 미사일협상에도 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도 제네바합의 이행 차원에서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1995.1.20), 미·북 직통전화 개설(1995.4.10), 대북 인도적 지원규제 해제 조치(1996.4.7) 이외에도 UN을 통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실시하고 미하원 정보위 대표단(1997.8) 등 정치·경제·사회단체 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하였다.

또한 북한의 정전체제 무실화 책동에 대응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한·미 정상이 제의(1996.4.16)한 4자회담에 대하여도 북한은 두차례의 예비회담에서 본회담 의제의 세분화와 선 식량지원 약속 등을 요구하여 난항을 야기하기도 하였으나 제3차 예비회담(1997.11.21)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문제’를 의제로서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제1차 본회담이 1997년 12월 9일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은 일본의 연립여3당 대표단과의 일·북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 합의(1995.3.30) 및 일본의 대북 쌀 지원(1995.6)이후 대일접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과 북한은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을 허용하겠다는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계기로 국교정상화를 위한 예비회담(1997.8.21~22)을 개최하여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실현과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인 처 방문단 제1진이 일본을 방문

(1997.11.8)하였으며, 연립여3당 대표단이 방북(11.11)하였다.

한편 북한은 우리와 국교수립으로 다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과는 당·정 및 사회단체 대표단을 빈번히 교류하는 한편 김정일과 강택민 주석이 등소평 사망, 홍콩반환 및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등 기념일을 계기로 조전과 축전을 상호 발송하는 등 황장엽 망명사건 처리시(1997.2)의 다소 불편했던 관계에도 불구하고 쌍방간 친선 유대강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러시아와도 1961년 7월에 체결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이 만료(1996.9)됨에 따라 군사적 동맹관계에서 일반적 국가관계로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 신조약의 체결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5년부터 시작된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형식의 1997년 신년사에서도 기존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인 ‘자주·평화·친선’ 원칙의 고수를 재천명하고 김정일의 이른바 「8·4노작」(「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8.4)을 통해서는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스스로의 태도 변화는 없이 이들 국가에 대해서만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은 기존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은 그대로 유지한 채 김정일 체제의 최대 당면과제인 체제 안정, 심각한 경제난 타개 및 외교적 고립 탈피를 위해 생존전략차원에서 실용주의노선을 병행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대외정책의 중심고리로 삼아 핵동결, 경수로건설 등 미·북 제네바 합의를 이행해 나가고 미군유해 발굴 및 미사일문제 등 양측간 현안사항에 대한 협상에도 응하여 추가 경제제재 해제 및 경제적 지원 확보 등 실리를 취하는 한편, 연락사무소 개설 등 대미관계 개선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수교를 이끌어내 체제 유지를 보장받으려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군사력 우위 유지, 북한 정권의 정통성 확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군사비 부담 해소 등을 위해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는 조기 국교수립을 목표로 국교정상화 회담의 재개를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조총련 및 일본내 친북단체들을 적극 활용, 국교 수립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하면서도 일본으로부터 최대한의 보상을 얻어내고자 노력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함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중국과의 친선유대 및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러시아와는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체제 구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한 그들 입장에 대한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동맹 국가들과의 친선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심각한 경제난 타개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동남아국가들과도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4. 대남정책

북한은 분단이후 지금까지 50여년간을 지속해온 대남 적화통일 기도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지난 1992년 개정된 헌법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사회주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조선노동당 규약에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당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반도의 공산화가 그들의 대남전략의 최종목표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대남 인식이나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내외 정세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남정책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있다.

분단이후 5년, 남북 쌍방이 정권을 수립한 지 2년만에 무력적화통일을 위해 일으킨 6·25 남침은 북한의 가장 공격적이며 강력한 대남정책이었다. 이후 1960년대말까지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1968.1),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1968.11) 등 각종 대담한 도발을 통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폭력성이 주조를 이루어 왔다.

1960년대의 폭력혁명정책이 실패하고 때마침 국제적인 동서 냉전 해빙무

드가 이는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1970년대 이후에는 대화와 대결을 병행하기 시작하여 대화없는 대결상태에서 대화있는 대결상태로 걸모양만 달라진 대남정책을 추구하였다.

1980년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통일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은 남과 북이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남과 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할 것 등 통일국가로서의 개념에 맞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 ‘남한 반공법 철폐’, ‘남한 현정권 퇴진’ 등을 요구함으로써 이 제의가 기본적으로는 ‘남조선해방론’에 입각한 적화통일노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일성사망(1994.7.8)이전까지 이와 같은 대화와 대결 병행 정책을 추구하던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남북관계를 단절시킨 채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시 정부의 조문불허 방침을 구실로 내세워 자신들의 대화거부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내외의 체제 위기적 상황 속에서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켜 이를 주민통제에 이용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저의에서 나온 책임전가용 대남비방책이라 하겠다.

북한은 1996년 1월 31일 개최한 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1996년을 ‘평화와 민족대단결의 해’로 설정하고 북·남·해외의 정당·단체 및 각계인사들과의 접촉과 대화를 제의함으로써 정상적인 남북대화 단절의 책임을 회피하고 한국내 무분별한 통일논의를 부추겨 국론분열을 획책하려는 통일전선 공세를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통일전선 공세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8·15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편승한 한총련의 연세대 점거 농성사태 등과 혼합시켜 남한사회 혼란 조성에 이용하였다.

북한은 또한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사건(1996.9.18), 경비정 서해 북방 한계선 월선 및 함포사건(1997.6.5), 비무장지대 우리측 GP충격 및 포격사건(1997.7.16) 등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을 자행하였다.

북한은 대남 교란을 위한 통일전선 공세와 무장도발을 자행하는 한편으로 우리 정부 및 대한적십자사와 민간단체들의 식량 및 인도적 대북지원 물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남북간 교역도 꾸준히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개별적 대북 투자를 요청하는 등 경제적 실리 추구를 외면하지 않고 있다. 최근 김정일은 당총비서 추대를 앞두고 소위 「8·4 노작」을 발표(1997.

8.4)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등 기존 대남정책들을 묶어 조국통일 3대헌장이라 명명하고, 이러한 기본노선을 자신도 그대로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당면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당분간은 큰 변화없이 정치적 통일전선공세와 경제적 실리추구를 근간으로 한 기존의 대남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5. 북한체제의 전망

북한은 남북분단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해 옴으로써 소련이나 동구의 국가들이 경험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더욱이 대남적화 통일의 가장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군사력의 사용을 설정하고 있는 북한은 대남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에 따라 왜곡된 투자구조의 심화에 따른 경공업의 피폐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불균형적 생산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근래에는 통제된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주민의 사회일탈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과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사실상 적화통일보다는 체제유지를 우선시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의 불만을 무마하고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도 북한은 경제난 해소와 주민 생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데올로기와 강압적인 방법을 통한 체제단속은 현재와 같은 생활고가 계속될 경우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은 체제단속을 강화하면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부분적으로라도 개방과 개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세계적인 흐름인 개방과 개혁을 계속 외면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제의 붕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지도부가 기존 체제의 고수로 인한 급격한 체제붕괴를 바라지 않는 한, 북한은 점차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선택하고 이를 남북간의 교류협력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평화적이고 질서있는 통일을 위한 중대한 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50년이상 고착되어온 사회주의 체제와 전체주의적 사고는 북한의 변화를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남 적화통일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정권의 존립명분을 축적해 온 북한으로서는 대남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힘들 것이다. 변화의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구적 요소들로 인해 북한의 개방과 변화는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최근 적발된 남파간첩사건이나 우리 언론기관에 대한 테러위협 등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의 수구적 요소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기존 대내외 정책과 대남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추진할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유훈통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힘이 아직도 절대적이며, 이를 바꿀 만한 리더십이 형성되어 있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여건과 북한 내부 정세간의 괴리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고, 이는 북한체제의 유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큰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남정책에서도 현실을 무시하고 기존의 혁명전략에 입각한 행태를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할 우리의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